

# 社 說

## 강원도 SOC 확충은 통일시대 대비하는 ‘사회적 투자’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기조가 기존 ‘축소’에서 ‘확대’로 바뀌었다. 도와 지역 정치권은 이 같은 예산 정책 변화가 도의 SOC 예산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SOC 예산이 17조8,000억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그보다 증액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8조원 규모인 생활혁신형 SOC 투자를 내년에 10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밀착형 SOC도 올해 6조원에서 내년 7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올 들어 성장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고용 쇼크를 맞게 되자 결국 즉각적인 경기 진작과 일자리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는 대규모 건설투자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도가 목표로 삼은 내년도 국비는 5조5,000억원 규모다. 도가 계획한 24개 주요 국비 현안사업 중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건설,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등 굵직한 교통망 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기재부는 17일까지 내년도 예산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SOC 투자를 매년 줄여 나가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다소 유연한 편성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내년도 기재부 예산안에 도 국비 사업이 더 포함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자.

내년은 도의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가 시작되는 첫해다. 올림픽 후광 효과는 물론 통일시대에 대비한 필수 남북 SOC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SOC가 충분히 확충되지 않으면 평창올림픽으로 인지도가 높아진 강원도의 위상을 지켜 나갈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지금 통일 대비 SOC 예산도 절실하다. 이는 도의 신성장 동력 창출과 직결돼 있는 사안이다. 열악한 지역의 재정으로는 SOC를 제대로 갖출 수 없다. 그러므로 도의 국비

확보는 곧 강원도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대한 문제다. 정부 예산안에서 사라진 도 SOC 사업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도록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 건설투자 예산 ‘축소’에서 ‘확대’로 변경  
도,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살려야  
주요 사업 하나라도 더 배정받는 것이 중요**

강원도의 내년 SOC 예산 확보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목표대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각시·도가 모두 총력전으로 국비 확보에 나서는 만큼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도와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체제도 당연하다. 이제부터 예산 확보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며 정부와 국회에서 예산을 얻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현안이 산적한 강원도다. 주요 SOC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면 걱정도 커질 수밖에 없다. 도와 국회의원들이 배수의 진을 쳐야 하는 이유다. ‘선택과 집중’으로 도내 주요 SOC 사업 중 하나라도 더 정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바람빠진 올림픽 특수, 도내 건설·광공업 침체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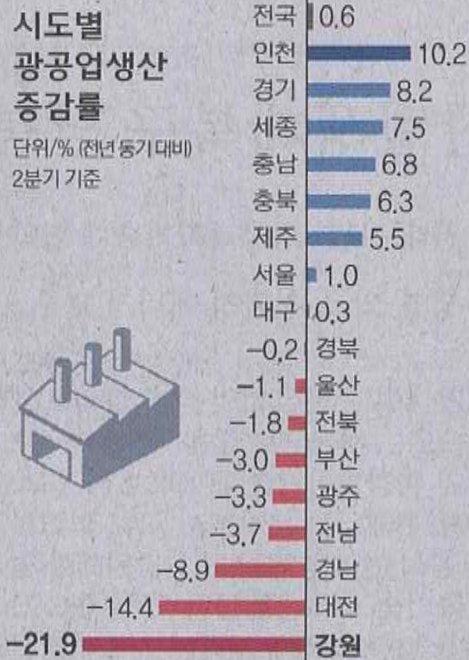
동계올림픽 이후 2분기 하락세  
 광업 생산지수 전년비 66.7%↓  
 SOC 수요 줄며 시멘트산업 '뚝'  
 건설수주액 8960억4300만원  
 1분기 대비 83.1% 급락

평창동계올림픽 특수로 한껏 부풀었던 강원도내 산업경제가 올림픽이 끝난 2분기부터 본격 하락세로 돌아섰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강원도내 광공업 생산지수는 117.3으로 전년 같은기간(150.1)과 비교해 21.9% 하락, 전국에서 가장 큰폭으로 떨어졌다. 광공업 중 올해 2분기 제조업지수는 전년동기(147.6)대비 17.4% 떨어진 121.9로 집계됐으며 광업은 올해 2분기 92.8을 기록해 지난해 2분기(278.9)와 비교해 66.7%하락했다. 광공업 중 전기 및 가스업 생산지수는 올림픽이 한창 진행됐던 올해 1분기 역대 최고치인 139.5를 기록한 이후 2분기 112로 19.7% 떨어졌다.

강원도 광공업은 광업에서는 비금속 광물인 시멘트가 전체 시장을 주도하고 제조업의 경우도 식품을 제외한 시멘트 관련 산업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2분기 올림픽 관련 시설과 도로, 철도 등 각종 SOC 건설이 집중되며 광공업지수가 통계가 확인되는 1975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관련 수요가 급격히 줄며 생산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원 건설산업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1분기 건설수주액은 5조3082억 8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6582억 8200만원)대비 706% 증가했다. 반면 올해 2분기 건설수주액은 8960억43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3.6% 하락했다. 전분기 대비해서는 83.1% 급락했다. 공



종별로는 건축분야가 전년동기대비 17.2% 상승했지만 토목이 -70.6%의 감소율을 기록, 최근 주거시설 중심 건축 수요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토목공사의 경우 대규모 건설공사가 끝나면서 본격 하락세로 전환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림픽 특수로 도내 소매업과 서비스업 지수는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올해 1분기 각각 5.1%, 3.8% 상승해 2015년과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올해 2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상승 폭이 둔화된 1%대에 그쳤다. 김석중 강원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호재가 끝나면서 건설업 침체에 따라 당분간 지역산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도운

**무더위 나기 무료영화 상영**  
 8월 19일 춘천시청 대회의실  
 오후 2시 굿다이너  
 오후 4시 박물관이 살아있다 : 비밀의 무덤  
 안전총괄담당관 250-4268



문 대통령·5黨 원내대표 '협치'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여·야 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회동은 작년 5월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안,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관련기사 4면

# ‘생활SOC’ 69兆 시장 열린다

文대통령 ‘과감한 투자’ 주문… 건산연, 지역밀착형 프로젝트 658건 발굴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이 전국 총 658건에, 사업비가 69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지역밀착형 생활인프라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최근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한 이후 민간 차원에서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목록과 규모를 산출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토목 SOC’를 뺀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지역 밀착형 생활 SOC라고 규정했지만, 이런 소규모 시설만으로는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건산연은 올해 국내 최초로 진행된 전국 단위의 인프라 수요조사 결과를 재분석했다. 당시 조사를 통해 모두 1244개, 총사업비 442조원 규모의 지역 핵심인프라 사업을 발굴했다.

### 시설물별 지역밀착형 ‘생활SOC’ 규모

환경 167건 20조3411억원	주거·생활 73건 3조2693억원
교통 119건 16조9732억원	관광 48건 4조6099억원
안전 111건 16조1771억원	교육·복지 41건 3조5040억원
문화·체육 85건 2조9032억원	산업단지 14건 1조2824억원

### ‘생활인프라’ 범위 확대 필요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이 가운데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상습지·정체 도로와 노후화된 상하수도, 산업단지 진입 도로, 보행·자전거 도로, 노후 교량에 대한 보수 및 신설 등 실생활과 밀접한 SOC 프로젝트만 따로 뽑았다. 단일 사업으로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1조5000억원)이 최대 규모일 만큼 100억~5000억원대 구간 중소규모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시설별로 보면 상하수도, 도시재생, 환경시설 등이 포함된 환경 분야가 167건, 20조341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권 도로, 철도역사·터미널, 주차장 등 교통 분야는 119건(16조9732억원), 재해위험

지구, 수리·방재시설, 내진보강, 침수 저감 등 안전 분야가 111건(16조1771억원)으로 ‘톱 3’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85건, 2조9032억원), 주거·생활(73건, 3조2693억원), 관광(48건, 4조6099억원), 교육·복지(41건, 3조5040억원), 산업단지(14건, 1조2824억원)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업 건수로는 전북(86건, 7조9234억원)이, 사업비로는 경북(11조5604억원, 39건)이 최다였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생활 SOC의 개념과 사업 범위를 좀 더 넓혀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이르면 이달 말 지역밀착형 생활 SOC 핵심프로젝트에 관한 세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호 건산연 원장은 “유럽에선 의료 시설과 서민주택은 물론이고 법원·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과 생활권 도로 같은 교통시설을 모두 합쳐 ‘사회 인프라’로 분류한다”면서 “이번에 선정한 지역 핵심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광의의 생활 SOC 사업을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